공간과사회 2019년 제29권 3호(통권 69호): 158~191
http://dx.doi.org/10.19097/kaser.2019.29.3.158

일반논문

녹색성장-갯벌어업-해삼양식
어셈블리지로 읽는 발전주의와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Green Growth-Tidal flat fisheries-Sea cucumber aquaculture: Rethinking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zation of nature through assemblage theory

최영래**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자연의 생산 사례로 녹색성장의 기치하에 집중적으로 육성된 해삼양식산업의 발전과정을 분석한다. 국가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기존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본 연구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혼종성 및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어셈블리지 개념을 도입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면적으로 포스트 발전국가의 전략적 산물로 나타나는 정책 및 제도는 실상 다양한 스케일의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개발의지가 교차하고 수렴된 결과물이다. 둘째, 녹색성장-갯벌어업-해삼양식의 일시적인 어셈블리지는 자연에 대한 발전주의적 의미를 증폭시키고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를 촉진시켰다. 셋째, 해삼은 인간 행위자들의 개발의지에 반하여 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단선적인 발전에 저항하는 행위성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발전주의는 발전국가의 유산인 동시에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욕망으로서 발전국가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사회를 구성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발전주의의 분석에 있어 어셈블리지적 관점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주요어: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어셈블리지/아상블라주, 발전주의, 녹색성장, 갯벌, 해삼

---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 (NRF-2017S1A3A2066514), SSRC Transregional Research Junior Scholar Fellowship, LMU Munich Rachel Carson Center for Environment and Society (RCC) Carson Writing Fellowship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플로리다국제대학교(FIU) 글로벌사회문화학과 조교수(raechoi@fiu.edu)

www.kci.go.kr

1. 서론

인간의 통제와 관리하에 바다생물을 키워 경제적 산물로 생산해내는, 이른바 '기르는 어업'인 양식업은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 산업이다. 인간과 다른 신체적, 생리학적 특성을 지닌 생물의 생태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해수나 먹이 등을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까닭에 생육조건을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도 어렵다. 적조, 바이러스, 혹은 고수온 등으로 쉽게 폐사하기도 하고, 예상보다 더딘 생장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식품산업이다(Belton & Thilsted, 2014; FAO, 2018). 남획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상에서 기르는 가축보다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인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혹은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의 대응방안으로, 양식업은 유망 있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Bostock et al., 2010). 거칠고 제멋대로인 야생의 자연(wilderness)을 통치하여 예측 가능한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월터스는 양식업을 연안어업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적 이상이 궁극적으로 실현된 사례로 본다(Walters, 2007). 정해진 공간에서 인력, 자원, 환경의 미시적 관리(micromanagement)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식업은 일종의 신자유주의적 통치기술(governing technique)이다(Marshall, 2001).

신자유주의적 자연의 생산을 촉진하는 장치로 이해되어 온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존 연구가 주목해 온 에너지, 온실가스, 물 정책 등 외에 양식업의 확대에도 기여했다. 양식업은 저발전된 자연으로서의 갯벌을 포섭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은 수산업 부문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외해양식과 함께 갯벌을 주목했다.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을 친환경 양식어장으로 개발하고 굴, 해삼 등 수출전략품목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갯벌어업'의 골자는 매립, 간척 등 파괴적

www.kci.go.kr

〈그림 1〉 불가사리, 성게 등과 같은 극피동물문(Echinodermata)에 속하며 국내 전 해역에 걸쳐 분포하는 돌기해삼(*Apostichopus japonicus*)

출처: 저자

인 방식 대신 "정착생물 채포 위주의 소극적"인 기존의 갯벌 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갯벌 해산물의 생산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10b: 9).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신갯벌어업 추진계획(2010-2014)'을 발표하는데, 이때부터 해삼은 갯벌어업의 전략적 육성 품종으로 주목받는다(농림수산식품부, 2010a; 2010c).

해삼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요 경제어종과는 거리가 먼 해산물이다(<그림 1>). 사실 해삼은 일제시대에 이미 "지나, 만주로 수출되고 있는 주요 수출품 중 하나"(≪동아일보≫, 1939)로 자원 고갈의 위기를 겪었고, 해방 이후에는 수산학자 및 민간 양식업자들에 의해 증산 및 대량 양식이 간헐적으로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내 어업 및 양식업 분야의 변두리를 서성이다 녹색성장

www.kci.go.kr

및 갯벌어업의 등장을 계기로 유례없는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해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갯벌어업과 해삼의 연합은 부자연스럽다. 해삼은 갯벌, 곧 조간대를 포함한 국내 연안에 널리 분포하는 생물이지만 자랄수록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까닭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성체 해삼은 갯벌 공간이 아닌 수심 10-20m 사이의 조하대에서 잠수를 통해 채취한다. 또한 보다 높은 강도의 집약적 양식 시설은 필연적으로 갯벌을 인공적으로 변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갯벌 이용을 추구하는 갯벌어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갯벌어업이 목표로 하는 해삼의 대량 생산은 과학적 정의에 따른 갯벌 공간의 활용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해삼은 어떻게 갯벌어업의 주력 품종이 되었을까? 해삼과 갯벌어업의 동거는 해삼양식산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연안어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등장한 갯벌에 대해, 또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로서의 녹색성장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질문들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프레임의 안과 밖에서 진행된 해삼양식산업의 발전과정을 추적한다. 갯벌에서 대량생산이 불가한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해삼이 갯벌어업을 대표하는 해산물로 자리매김하게 된 과정은, 역설적으로 갯벌을 기술적 정의의 조간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본화가 덜 진행된, 잠재적인 축적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전'국가'를 넘어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발전주의 멘탈리티가 드러난다. 본 연구는 발전국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을 비롯한 혼종적인 요소 및 과정들의 얽힘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외형적으로 포스트발전국가가 주도한 전략, 정책, 제도 등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읽히는 해삼양식산업이 실상은 일시적이며 때로는 우발적인 마주침들에 의해 전개되어 왔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분산되어 있는 다수 행위자들의 개발의지

www.kci.go.kr

가 수렴되고 강화되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의 메커니즘으로 녹색성장을 재해석할 것을 촉구한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어셈블리지적 접근을 시도한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천 개의 고원』에서 제시한 어셈블리지의 핵심은 혼종적인 요소들의 모임으로, 무엇이 이질적인 요소들, 곧 담론, 기술, 물질, 실천 등을 일시적으로나마 일관성 있는 전체로 만들어내는가에 방점을 둔다(Deleuze, 2007; Deleuze & Guattari, 1987). 어셈블리지적 접근은 인과관계의 추론을 강요하고 결정론적인 해석에 집착하는 기존의 구조주의적 관점을 지양하면서, 우발적인(contingent) 것들이 모여지는 현상을 연구의 전제조건이 아닌 연구의 대상 그 자체로 본다(Cons & Eilenberg, 2019). 인과관계적이며 구조적인 해석에 천착하지 않는 어셈블리지적 접근을 통해, 본 연구는 국가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국내 학계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2010년 초반에 발생한 녹색성장, 갯벌어업, 해삼양식산업이라는 세 가지 과정의 일시적인 수렴 국면, 그로 인한 갯벌 및 해삼의 담론적, 물질적 신자유주의화에 주목한다. 이때 녹색성장은 녹색경제, 청색경제 등 '지속가능발전'의 아류로서의 패러다임이 아닌 이명박 정권 시대에 등장한 국가계획으로 국한하도록 한다. 정부 문건, 언론 기사를 비롯한 공식적인 담론 분석에 더하여, 본 논문은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 간의 개별적인 교류에 주목한다. 해삼양식산업의 발전과 관계된 주요한 행위자들로 국가 산하 과학 및 정책 연구소, 민간 양식업자 및 어업인, 대중 무역 기업들,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연구소, 언론 등이 있다. 필자는 2016-2018년 여름에 걸쳐 주요 행위자 유형에 따른 심층 인터뷰 및 해삼양식 관련 시설 방문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발전국가를 넘어선 발전주의를 사고하는 데 유용한 어셈블리지 개념에 관해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3절부터 6절까지는 각각 녹색성장 어셈블리지의 형성, 갯벌과 어촌공동체의 신자유주의화 측면에서 갯벌어업의 의의, 갯벌어업과

www.kci.go.kr

해삼의 어셈블리지에 따른 해삼의 신자유주의적 생산, 신자유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는 비인간 행위자 해삼의 저항 및 어셈블리지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해삼에 대한 발전주의적 시각을 다룬다. 결론에서는 어셈블리지적 관점의 유용성 및 본 사례 연구의 이론적 의의를 정리한다.

2. 어셈블리지적 관점: 발전국가를 넘어 발전주의로

1) 어셈블리지란 무엇인가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해 발전된 아상블라주, 곧 어셈블리지는 후기구조주의의 관계적 사고를 대표하는 개념이다. 어셈블리지는 일반적으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또는 혼종적 결합체'(최병두, 2017)로 정의되지만, 실체적(thing) 정의보다는 속성적 정의를 통해 어셈블리지를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어셈블리지의 핵심적인 특질은 혼종성 및 역동성이다. 어셈블리지의 구성요소는 행위자에 제한되지 않는다.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를 비롯하여 자본, 인프라, 법, 제도를 비롯한 다양하고 다중적인 사회적 과정들이 어셈블리지를 구성한다. 어셈블리지의 의미는 "어떤 고정된 본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들 속에서 창출"된다(최병두, 2017: 172). 또한 어셈블리지는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다.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는 어셈블리지가 '구축'된다는 식의 표현은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 어셈블리지는 유체성(liquidit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어셈블리지는 모이고, 흐르고, 흩어진다. 그러나 이때 형성되는 어셈블리지는 의미 없는 무작위적 묶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나마 일관적인 전체이다. 따라서 들뢰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셈블리지 연구의 중심 주제는 어셈블리지 그 자체의 행동(behavior)보다도 혼종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정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어셈블리지를

www.kci.go.kr

형성하는지, 또한 그렇게 형성된 어셈블리지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사라지고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Deleuze, 2007).

김숙진(2016)은 어셈블리지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흐름, 연결, 생성에 의해 특정지워지고, 작동 논리가 구조보다는 접혀짐에, 선형적이기보다는 더 복잡하고, 변증법적이기보다는 더 순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기보다는 더 창발적"이기 때문이라고 논한 바 있다(김숙진, 2016: 312). 방법론으로서 어셈블리지적 관점이란, 다양한 사회적, 물질적 요소들이 수렴하는 지점들(convergences)이 어떻게 그리고 왜 생성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타냐 리(Tania Li)의 표현에 따르면 '국면적 접근(a conjunctural approach)'이다(Li, 2007; 2014). 콘즈와 아일렌버그는 국면적 접근을 특정한 시점 및 장소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어셈블리지들을 발견하기에 적절한 방법론으로 규정하며, 지리학과 인류학에서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수렴점들을 파악'하는 툴로 활용되어 왔다고 평가한다(Cons & Eilenberg, 2019; Lorimer, 2015; Steinberg, 2001; Tsing, 2015). 서로 어울리지 않는 갯벌어업과 해삼양식이 '자연을 이용한 경제성장'을 추구한 녹색성장의 기치하에 일시적으로 정합하다 흩어지는 일련의 과정 또한 이러한 어셈블리지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 어셈블리지적 관점은 녹색성장-갯벌어업-해삼양식의 연합을 포스트발전국가가 주도한 정책이나 전략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동적인 전체로 볼 수 있게 해준다.

2) 정동, 욕망, 개발의지, 발전주의

마커스와 사카에 의하면, 어셈블리지적 관점은 불안정하고 혼종적인 구조를 지닌 복잡계를 들여다보기에 특히 유용하다(Marcus & Saka, 2006). 어셈블리지 이론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더불어 1980년대 후기구조주의로의 전환을 통해 발전하였으며 둘 다 이종적인 요소들의 모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두 이론을 비교연구한 뮬러와 슈어에 의하

www.kci.go.kr

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연결 및 상호작용, 흐름 자체에 천착하는 반면 어셈블리지 이론은 애초에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일관적인 전체로 묶이게 되었는지를 질문하며, 그러한 점에서 어셈블리지 이론은 정동(affect)을 보다 면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Müller & Schurr, 2016). 어셈블리지를 형성하는 아교 역할을 하는 매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뮬러와 슈어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욕망하는 기계(desiring machines)' 개념을 통해 제시한 욕망(desire)에 주목한다(Deleuze, 2004; Deleuze & Guattari, 1987; Müller & Schurr, 2016). 그들은 욕망이야말로 구조적인 힘의 부재에도 어셈블리지가 형성될 수 있는 동력으로 본다. 어셈블리지는 흩어져 있던 개별 행위자들의 욕망을 수렴하여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어셈블리지는 욕망이 투사되고, 동시에 재생산되는 장소로서 기능한다. "어셈블리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곧 욕망의 생산을 분석하는 것이다"(Müller & Schurr, 2016: 224).

이러한 어셈블리지적 관점, 특히 어셈블리지의 정동적 특질은 동아시아의 포스트발전국가 맥락에서 국가를 넘어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욕망으로서의 발전'주의'(developmental-ism)를 분석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1] 기존의 발전국가 논의 또한 지나치게 경직되고 구조적인 국가 개념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제솝의 전략국가론(Jessop, 2008) 등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국가의 의미 및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비국가의 경계를 유연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국가

1) 국내 사회과학 학계에서 발전주의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발전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성분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적 성분으로 국가를 요청한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으며, (국가중심적) 발전주의와 (시장중심적) 신자유주의의 관계를 중첩적인 이행으로 보는 근거로 쓰인다(최병두, 2007). 본 논문은 이러한 경제·정치 중심의 관점을 넘어 통치성으로서, 나아가 정동으로서의 발전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해석을 시도한다. 이때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질적으로 다른 지향성을 지니므로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관계 또한 병렬적 대치 혹은 이행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www.kci.go.kr

이론에서 국가는 여전히 여타의 행위자들과 차별되는 중심적인 행위자이고, 비국가 행위자들은 국가의 이해관계에 조응하거나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집단적 욕망으로서의 발전주의 개념은 개인과 집단의 심리(mentality)적 영역에 깊이 스며 들어가 있는 개발의지를 이론화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녹색성장-갯벌어업-해삼양식 어셈블리지를 다양한 국가, 비국가 행위자들의 개발의지가 모여들어 연결되고 정당화되어 갯벌과 해삼에 대한 기존과 차별된 발전주의적 시각을 형성한 기폭적인 순간으로 진단한다.

어셈블리지적 관점은 발전국가의 외형적 요소 및 정치경제적 유산뿐만 아니라 통치성(governmentality)으로서의 발전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국가 중심적 사유를 넘어서는 이론적, 방법론적 바탕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의 발전사 및 토지-사회 관계를 연구하는 타냐 리에 따르면 개발의지(will to improve)는 규율(discipline)과 대비되는, 거리를 두고 작동하는 통치(government) 권력의 영역에서 분석해야 하는 개념이다. 통치는 사회구성원들의 몸을 직접적으로 억압하지 않는 대신 그들의 "욕망을 교육시키고, 습관과 소망과 믿음을 형성한다. [통치는] 조건을 설정한다. [그러한] 인위적 배열을 통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한다"(Li, 2007: 5). 통치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발의지는 소수의 권력층뿐만 아니라 무수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내재화하는 것이다. 발전국가의 외형적 장치가 사라진 뒤에도, 개발의지는 사회구성원들의 욕망으로 대체되어 재생산된다. 마찬가지로, 갯벌과 해삼에 투영되는 발전주의적 욕망은 녹색성장-갯벌어업-해삼양식의 어셈블리지가 느슨해지고 흩어진 이후에도 개별 행위자들에 의해 재생산되어 해양공간과 생물의 거버넌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발전'주의'는 발전국가의 유산인 동시에, 발전'국가' 이후에도 사회를 구성하는 원동력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www.kci.go.kr

3. 녹색성장: 발전국가-신자유주의 어셈블리지의 형성

통치성으로서의 발전주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포스트발전국가들이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급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외형적으로는 권위적인 국가를 상정하는 발전국가와 최소 국가로부터 출발한 신자유주의가 상충하지만, 통치성의 측면에서는 '저발전은 비정상, 발전은 규범(norm)'이라는 합리성 및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는 멘탈리티를 추구하는 발전주의와(Korf, 2010) 자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덜 자본화되어 있는 공간과 자연을 공격적으로 파고드는 신자유주의의 속성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푸코적인 시각에서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로 거리를 두고 작동하는 환경적 권력(environmental power)으로, 시장 중심, 경제적 효율, 경쟁력과 같은 합리성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한다(Foucault, 2010).

이러한 시각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가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 자체도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가 얽힌 어셈블리지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뒤 얼마 되지 않아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이 수립되며,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후속 계획들이 발빠르게 수립되고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발전의 목표를 정부 리더가 설정하고, 국민을 위로부터 동원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박정희 개발모델의 연장선상"(최장집, 2008.1.1; 김인영, 2011에서 발췌)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녹색성장은 자본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가 축적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을 포섭하는 '환경적 조정(environmental fix)'의 측면에서(최병두, 2010), 또한 궁극적으로 자연의 "사유화, 시장화, 기업화, 탈규제 및 재규제화, 거버넌스의 재스케일화, 실질적 포섭 및 외부화"(Bakker, 2010)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이다.

국내 비판학계는 녹색성장에서 나타나는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의

www.kci.go.kr

상충적인 연합을 이해하기 위해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경로의존성, 1997-1998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재해석된 신자유주의 개념 등을 끌어들였다. 이상헌(2009)은 녹색성장을 한국적 맥락의 신자유주의화, 곧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의 신자유주의적 재현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그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4대강 사업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은 채 추진된 배경에 '신개발주의적 성격의 토건지향적 국가'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최병두(2010)는 Brenner·Theodore(2003)가 주장한 퇴행적(roll-back), 개입적(roll-out) 신자유주의의 차이를 소개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국가가 시장의 논리를 이행하기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자원을 재분배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포스트발전국가에서 국가의 역할은 예전만큼 지배적이지 않으며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을 가르는 경계 또한 공고하지 않다. 이러한 통찰을 반영하여 이상헌(2009)은 상술한 토건지향적 국가의 행위를 지역 성장연합들의 이해관계에 영향받는 영역화의 정치(박배균, 2009)로 해석하였으며, 황진태·박배균(2013)은 카스트리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Castree, 2008a; 2008b)가 국가에서 시장·시민사회로의 권한 이양이 전제된 서구적 시각임을 지적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사회세력들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국가로 하여금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를 주도하게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장덕수·황진태(2017)는 표면적으로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이면에 상이한 사회세력들의 경합이 존재하며, 그들이 각각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장덕수·황진태, 2017: 228)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화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국가의 역할과 함께 여타 행위자들의 주체성이 강조되어 오기는 했지만, 발전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시각만으로는 자연-사회 관계의 전환점으로서 녹색성장이 가져올 장기적인 변화를 통찰하기 쉽지

www.kci.go.kr

않다. 실제로 녹색성장 관련 연구는 2009~2010년을 전후로 4대강 사업, 에너지 정책, 녹색기술 등에 집중되었고, 박근혜 정부 출범 및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종료와 함께 학계의 관심도 크게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언론에 노출되거나 학계의 관심을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녹색성장의 의의는 일시적인 자본의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적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발전국가를 넘어선 발전주의적 관점에서 녹색성장이란 한국 사회 내에서 분산, 분절되어 있던 개발의지들이 응집되고 연결된 어셈블리지다. 이러한 어셈블리지적 관점에서, 우리는 포스트발전국가가 생산해 낸 외형적 성과(국가계획으로 등장했다 폐기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저에서 강화되고 증폭되는 발전주의, 그로 인해 견인되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사회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타냐 리가 지적하듯, 녹색성장이라는 하나의 어셈블리지를 구성하는 요소들 각자는 새롭지 않을 수 있다(Li, 2007). 그러나 기존의 정책, 담론, 사고방식 등 익숙하고 낡은 것들이 혼종적으로 모여듦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자연을 생산, 관리, 통제하는 힘으로 거듭난다. 녹색, 곧 환경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는 기치하에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 양식업계 행위자들이 자연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혹은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자발적으로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녹색성장은 통치적이다. 궁극적으로 녹색성장은 자본주의에 덜 포섭된 자연을 대대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자연을 잠재적인 경제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국가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 어셈블리지는 단명했지만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자연-사회 패러다임으로서의 녹색성장은 현재진행형이다.

www.kci.go.kr

4. 갯벌어업의 등장: 갯벌 및 어촌공동체의 신자유주의화

본 절은 녹색성장하에서 등장한 갯벌어업이 혼종적인 지식 및 담론의 혼합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어셈블리지로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갯벌과 어촌공동체의 신자유주의를 촉진하는 갯벌어업의 의의에 대해 다룬다. 2010년 농림수산부가 '신갯벌어업 추진계획(2010-2014)'을 발표할 때만 해도 '갯벌어업'은 생소한 개념이었다.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 및 시화호·새만금 간척 반대 시민운동의 시기를 거치며 국가정책 기조에서 갯벌은 개발, 곧 매립과 간척의 대상에서 보전과 보호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어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는데, 첫째는 갯벌의 위협자이고 둘째는 갯벌 보전의 동반자이다. 두 시각 모두 어민을 갯벌의 이용자로 인정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업의 존재와 영향은 갯벌 보전 담론에서 오랫동안 다뤄지지 않았다. 그들의 경제적 어로활동의 필요를 인정하게 되면 어민을 갯벌의 위협자로 보는 시각에 균열이 가고, 어민을 갯벌 보전의 동반자로 보는 시각은 어로활동보다도 생태관광 등 갯벌의 간접적 이용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들고나온 '갯벌어업'의 등장은 갯벌 보전론자들을 적잖이 당황시켰다.

5개년 계획이 제시하는 갯벌어업은 단순히 갯벌 공간에서 수행되는 어로활동을 뜻하지 않는다. 갯벌어업은 자연을 자원으로 재인식하고 자본의 효율적인 축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의지를 담고 있다. '신갯벌어업 추진계획(2010-2014)'(이하 5개년 계획)의 비전은 "갯벌 수산자원을 수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하여 2015년까지 "친환경 갯벌어업수출단지 7개소 조성, 갯벌 수산식품 5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10a). 이는 대략 6,900억 원의 부가가치와 3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표면적으로 볼 때 5개년 계획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 계획의 수립, 선택과 집중 전

www.kci.go.kr

략, 수출을 목표로 한 상품 발굴 등 '발전주의 스타일'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측면에서 갯벌어업의 등장은 세 가지 의의를 드러낸다. 첫째, 갯벌어업은 매립·간척의 대상으로 갯벌을 사유하는 개발담론과 보전·보호의 대상으로 갯벌을 바라보는 환경담론을 혼합하여 친환경적인, 즉 갯벌 자체를 파괴하지 않지만 갯벌을 보다 집약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갯벌 담론을 생산한다. 5개년 계획에서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고, 서울시의 4.2배, 우리나라 전국토의 2.5%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0조원으로 추산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3%만 활용되고 있는 공간으로 소개된다(농림수산식품부, 2010c). 갯벌의 경제적 가치와 낮은 이용도의 병렬(juxtaposition)은 갯벌을 경제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저발전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이는 갯벌 자체를 '쓸모없는 땅' 곧 생산적 가치가 없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개발담론 및 갯벌의 이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환경담론과 차별되는 새로운 시각이다. 갯벌 자체의 생산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원으로 인식함으로써, 갯벌어업은 자본의 축적에 보다 용이한 갯벌을 만들어낸다. 나아가, 담론적 자연의 생산은 물질적 생산을 도모한다(Smith, 1984). 5개년 계획은 갯벌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수출전략품종을 발굴하고, 갯벌어업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생산인프라의 구축이란 갯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바닥갈이, 투석, 종묘 방류 등의 시행을 의미한다. 매립·간척이 가져오는 불가역적인 환경적 영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는 갯벌어업이 자본의 회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갯벌의 물질성을 변화시킬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이렇듯 '높은 경제적 잠재성을 지닌 저발전 공간'으로의 갯벌은 혼종적이고 모순적인 지식의 얽힘(entanglement)을 통해 구성된다. 농

www.kci.go.kr

림수산식품부가 저발전된 갯벌이 지닌 잠재적 가치로 소개하는 10조 원의 출처는 해양수산부가 6년에 걸쳐 진행한 「갯벌 생태계조사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연구」의 마지막 연차보고서(한국해양연구원, 2005)다. 그런데 이때의 10조 원, 정확히 9조 9,934억 원은 수산물 생산 외에 갯벌의 정화기능, 여가 가치, 재해 방지, 서식지 제공 등을 경제적 가치로 추정한 결과물이다. 즉, 10조 원의 가치는 갯벌을 있는 그대로 보전했을 때 실현되는 가치이며, 갯벌의 추가적, 집약적 이용은 오히려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어불성설의 상황인 것이다. 의도적이든 혹은 우발적이든 혼란과 얽힘을 거쳐 기존에 갯벌이 지닌 의미들을 해체시키면서 재구성하는 작업은 신자유주의적 갯벌의 생산에 필수적이다.

셋째, 갯벌어업은 마을어장으로 대표되는 갯벌의 운영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갯벌 공간뿐 아니라 어촌공동체의 신자유주의화를 촉진한다. 5개년 계획에서 '갯벌어업 개발제도 마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법률 제·개정은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시도되면서 갯벌의 기업화 및 사유화를 도모했다. 2011년 당시 국회에서 발의된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양식어업법) 제정 및 수산업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갯벌양식어업법은 '신갯벌어업 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종을 생산하는 '갯벌양식어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의 실시 등을 담고 있었고, 더불어 제안된 수산업법 개정안은 예외조항들을 신설하여 갯벌양식어업법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폐쇄적인 갯벌이용체계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공간적으로는 자원조성, 포획, 채취 등 저강도 양식으로 운영되는 마을어장에 기술, 시설집약적인 고강도 양식을 허용하고, 접근의 측면으로는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 조합원 외에는 임대차가 금지되어 있는 어업권을 외부 자본 90% 미만으로 출자된 어업회사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 입법안은 시민단체, 어업인,[2)]

www.kci.go.kr

그들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2014년까지 계류하다가 폐지되었는데, 당시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가칭) 갯벌민영화 반대 및 갯벌보전 전국연대'는 입법안을 "갯벌과 어업을 기업에 넘겨 민영화(사유화)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을어장에서 자율어업을 통해 행해지던 어업권은 대규모 자본과 기업에게 빼앗겨 우리의 어촌공동체는 붕괴되고, 약탈적인 대규모 양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이다. … 한번 외부 자본의 유입이 가능토록 개정이 되고 나면, 기업 자본 유입 비율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열어 놓는 순간부터 마을어장은 기업의 이윤추구의 시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갯벌 민영화는 흡사,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장악하여 중소상인들을 거리로 내몬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가칭) 갯벌민영화 반대 및 갯벌보전 전국연대, 2012].

5. 갯벌어업-해삼양식 어셈블리지: 해삼의 신자유주의적 생산

본 절은 녹색성장의 기치하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개발의지가 모여들면서 갯벌어업과 해삼이 엮인 어셈블리지를 분석한다. 상술하였듯 해삼이 '신갯벌어업 추진계획'에서 수출전략품종으로 지목된 사실은 해삼의 생태를 고려할 때 의아함을 불러일으킨다. 해삼은 갯벌양식어업법이 정의내린 기술적 의미의 갯벌, 곧 "연중 최고만조시(最高滿潮時)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연중 최저간조시(最低干潮時)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갯벌구역"에서 발견되

2) 당시 지역 어업인들의 입장은 양분되었다. 일부 기업가적(entrepreneurial) 어업인들은 갯벌양식어업법이 가져올 외부 자본의 유입이 어촌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어업인 A, 2018.11.23).

www.kci.go.kr

는 동물이지만, 성장할수록 갯벌보다 깊은 바다, 즉 조하대로 들어가 서식하는 습성이 있다. 해삼을 양식하는 세 가지 방식 중 자연 상태의 연안공간을 활용하는 씨뿌림 양식은 사실상 갯벌보다도 조하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갯벌에 둑을 쌓아 인공 양식장을 조성하는 축제식 양식은 갯벌의 인위적 변경이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육상수조식 양식은 갯벌과 관계없이 연안에 접한 육지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해삼은 어떻게 갯벌어업의 전략품종이 되었을까? 다시 말해, 갯벌어업과 해삼양식의 부자연스러운 연합을 가능하게 한 아교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갯벌어업과는 별개로, 해삼양식은 오래전부터 시도되었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하던 산업이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여타의 경제적 어종에 밀려 해삼은 수산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일부 진취적인 수산학자 및 개별어업인들에 의해 전복 및 미역 등과 함께 키우는 복합양식, 해삼의 재생능력을 활용하여 어린 해삼의 소화관만 채취한 뒤 방류하여 이후에 다시 채포하는 "소화관 이모작" 등의 기술 개발이 시도되었지만 보편화되지 못했다(나오진, 1963.1.4). 당시의 해삼양식이란 어린 해삼을 자연상태에서 채포한 뒤 인공어초 등이 투하된 특정 장소에 방류하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른바 해삼양식 면허가 허가된 지역도 주로 "자연적으로 해삼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해삼양식업자 A, 2018.12.3). 해삼양식 기술은 1990년대 국립수산과학원이 일본의 양식 기술 및 패류 등을 대상으로 축적된 국내 양식 기술을 참조하여 '인공종묘'의 생산, 곧 자연 상태에서 채포한 해삼을 실험실로 가져온 뒤 외부 자극을 주어 방란, 방정을 유도하는 인공수정을 성공하면서 일시적으로 도약한다. 하지만 수정란에서 부화한 유생을 방류가 가능한 크기의 해삼 단계까지 사육하는 데까지 비용 대비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해삼양식은 "2003년까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20만 마리 내외로 소량의 해삼종묘를 생산하여 자원조성용으로 어촌계 공동어장에 방류하여 왔지만 민간에 의한 종묘생산량은 전혀 없었다"(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www.kci.go.kr

2006: 21). 또한 간척·매립으로 인한 연안서식지 파괴, 유류유출사고 및 산업화로 인한 폐수 배출 등으로 인해 해삼의 연간 생산량은 1983년 3,966톤을 정점으로 1990년 2,491톤, 2002년 833톤까지 꾸준히 감소한다(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2006; 이채성·박영제, 1999).

이렇듯 국내 양식업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해삼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00년대 들어 해삼의 주요한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부상한 중국이다. 최초에 중국의 해삼이 어떻게 국내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하지만, 기원(origin)의 추적은 다중성을 특징으로 하는 어셈블리지의 이해에 있어 부차적인 연구주제이다(Foucault, 1977). 중요한 것은 중국이 종묘 수입업자로부터 중앙 정부 엘리트에 이르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개발의지가 투영되고 얽히게 되는 지점(node)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개별 '보따리상'과 민간 수산 종묘상들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해삼 종묘가 음성적으로 수입되면서 중국의 해삼양식 기술수준과 소비규모에 대한 지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삼양식 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03~2005년간 3년에 걸쳐 수행한 '해삼양식 기술개발' 사업을 담당한 수산과학자 B에 의하면 중국은 해삼양식에 있어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계기였다:

> (2000년대 이전에는) 해삼이 양식대상품종인 것도 몰랐죠… 당시에는 해삼이 kg당 7,000원밖에 되지 않았구요. 우리나라에서 해삼은 살아있는 것을 썰어서 먹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랬다가 몇 분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봤더니 중국에서는 축제식 양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죠. 해삼이 대량양식이 가능한 품종이라는 것을… 중국을 갔는데 거기서 해삼양식하는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부자인 거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수산과학자 B, 2018. 11.21).

www.kci.go.kr

‘신갯벌어업 추진계획’에서 해삼양식이 국가에 의해 전략적으로 수립된 수출 산업으로 서술되는 것과 달리, 실제 해삼양식산업의 발전은 이처럼 해삼양식을 통한 부의 축적이라는 욕망을 중심으로 혼종적인 행위자들이 모여들면서 이루어졌다. 상술한 인용에서 ‘우리’는 국가기관 연구자, 어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은 중국 해삼 산지 투어, 양식 기술 및 시설의 공유, 해삼양식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 증대 등을 위해 협력했다. 또한 민간은 종종 국가적 혹은 지자체 차원의 연구에 개입하고 심지어 의제 개발을 주도하기도 했다. 일례로 어업인 A의 “사실 연구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해삼양식 관련 연구를 “억지로 다 끄집어다가 시킨” 경험은(2018.11.23), “어민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은 민원이므로 해결해야 하는” 당위가 해삼 관련 연구사업 개발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해당 지자체 산하 수산연구소 연구자 C의 설명과 부합한다(2018.12.3).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국가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는 민간행위자들의 실천(practice)에 떠밀려 행동하기도 했다. 중국 기준으로 방류가 불가능할 만큼 작고 생존률이 낮은 종묘가 헐값에 들어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방류사업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문제와, 국내 종묘 생산업체에 고용된 중국 기술자들이 입국하면서 국내 양식 기준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물질들을 양식 재료로 가져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박광재, 2018) 국가가 직접 해삼양식산업에 참여해야 했다. 다시 말해, 해삼 생산자로서 중국의 존재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가의 통치를 비켜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가는 해삼양식산업을 양성화하고 산업 발전을 주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서로 불일치하는 갯벌어업과 해삼양식의 연합은 단순히 탁상행정의 과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로 보기 어렵다. 상술한 다수의 행위자들은 갯벌을 경제적 가능성을 지닌 저발전 공간으로, 해삼을 중국으로의 수출을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

www.kci.go.kr

는 상품으로 해석하는 발전주의적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갯벌과 해삼을 연결하는 일관적인 논리를 창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5개년 계획에 앞서, 해삼이 갯벌어업의 주력 품종으로 제시된 문건은 2009년 10월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갯벌연구소가 발표한 '갯벌의 종합적 이용 방안'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갯벌연구소장은 상술한 '해삼양식 기술개발'사업의 총괄연구책임자로, 그는 해삼의 대량생산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른 갯벌이 아닌 "중국에서 연간 해삼 생산량의 70%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진 축제식 양식을 활용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2006). 따라서 본 문건은 양식장이나 폐염전, 혹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낮은 유휴 갯벌"에서 해삼양식을 시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2009),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용도가 낮은 기존의 간척지 또한 일종의 갯벌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저발전된 연안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갯벌' 공간은 조상대까지도 무리없이 확대되었고, 해삼양식 또한 갯벌어업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이렇듯 저발전된 자연을 축적의 대상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는 5개년 계획에서 더욱 일반화되어, 전국적 단위의 조간대와 저이용 상태의 조상대, 조하대 연안공간이 "신개념의 고부가가치 명품 산업화 양식단지"의 입지로 거론되었다.

갯벌어업의 갯벌이 단순히 조간대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해삼양식 또한 발전주의 세례를 받고 수출 중심의 산업으로 부각되었다. 중국 내 해삼 생산량이 2003년에서 2010년 사이 34,100톤에서 130,303톤으로 382%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해삼 수입 평균가격 또한 10년 만에 20배 가까이 치솟고… 중국 내 생산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은 한국에게 절호의 수출 기회로 인식되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80). 정부는 해삼을 중국과의 FTA 체결시 국내 수산물 중 거의 유일하게 고가로 수출이 가능한, "연간 1만 톤을 생산·가공할

www.kci.go.kr

경우 4,000억~5,000억 원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산물로 평가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10a). 해삼은 개체굴과 함께 '신갯벌어업 추진계획'의 '5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쌍두마차로 그려졌다.

이처럼 갯벌과 해삼은 저발전된 연안공간과 그러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갯벌어업의 프레임하에서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일관성을 획득한 어셈블리지를 형성했다. 갯벌어업을 계기로 해삼양식산업은 전례 없는 주목을 받았다. 5개년 계획을 비롯한 후속 사업에서 국가는 종묘생산 및 중간육성, 가공, 유통 및 수출 등 해삼양식산업의 전 과정에 전폭적인 투자를 계획했다. 중국 시장에 "2020년까지 수출 1조 원을 목표"로 해삼은 2011년 '세계 수산시장 변화에 대응한 수산분야 10대 전략품목 육성계획'에 포함되었으며 2012년에는 해삼종묘생산시설 설치사업 및 해삼연구센터 건립사업이 발표되었다. 2013년에는 2020년까지 해삼양식단지 50개소 조성 및 3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한 전복·해삼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 시범적으로 전복섬 1개소(진도) 및 해삼섬 6개소 사업이 착수되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 사업 대부분은 국고와 더불어 지자체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하므로, 2011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 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해삼양식산업에 투자되었다(박종면, 2018.10.3)(<그림 2> 참조).

한편 해삼양식 기술은 국가 연구소 및 지방 분소들을 중심으로, 지역 어업인 및 양식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하였다. 2013년에는 유형별(해상가두리, 축제식, 육상수조식) 양식기술 개발 사업 및 축제식 양식적지 개발, 배합사료 개발이 착수되었고 2015년에는 종묘생산 양식기술 개발 사업이 시행되었다. 2017년에 시작된 국외 우수품종 이식연구사업의 주요 내용은 고가에 거래되는 일본 및 러시아산 '고품질' 해삼과 국내산 해삼의 교잡을 통한 품종개량이다(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2017). 갯벌과 마찬가지로, 이는 해삼의 물질성이 상품적 가치의 증대, 곧 축적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시사한다. 이처

www.kci.go.kr

〈그림 2〉 해삼 양식 시험장

출처: 저자

럼 녹색성장은 이윤 창출 극대화를 추구하며 자연을 재구성(reconfigure)하는 동력이 되었다.

6. 어셈블리지의 해체 및 통치성으로서 지속되는 발전주의

본 절은 녹색성장-갯벌-해삼 어셈블리지가 해체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녹색성장과 갯벌어업, 해삼으로 정렬된 어셈블리지는 국내 양식업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해산물인 해삼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증폭시킨 지 오래 가지 않아 느슨해졌다. 이는 정권의 교체에 따른 국가적 단위의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관심의 저하와 더불어, 해삼양식과 갯벌어업의 개념적 충돌, 그리고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이라는 목표 달성에 저항한, 즉 인간 행위자들의 개발의지와 상충하는 비인간 행위자 해삼의 행위성(agency)의 결과로

www.kci.go.kr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갯벌어업을 통해 정당화되고 강화된 발전주의적 시각, 곧 해삼의 대량 생산과 중국 수출을 통해 개인 및 지역 경제의 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은 어셈블리지의 약화와 해체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상술한 바, 애초에 '갯벌어업'에 내포된 갯벌의 의미는 과학적, 기술적 갯벌의 정의와 동일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갯벌은 경제적 활용도가 높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축적공간을 뜻했고, 해수가 유통되는 개방된 조간대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의 간척지, 조하대 및 천해까지도 갯벌어업의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었다. 실제로 갯벌어업 프레임하에서 착수된 해삼 관련 사업들 중 조간대 공간에서 시행된 사업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해삼양식은 축제식 방식과 씨뿌림 방식(해삼섬), 이른바 '투트랙(two-track)'으로 기획되었는데 축제식양식은 상술하였듯이 폐염전, 양식장 등을 활용해 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수산 연구소를 중심으로 민간 양식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고, 해삼섬 사업은 어촌계가 운영하는 수심 10~20m의 마을어장 공간에 시설에서 키워낸 종묘(어린 해삼)를 방목하는 방식이었다(수산과학자 B, 2018.11.21). 실제로 해삼섬으로 지정된 태안 승언리, 인천 백령도, 통영 추도, 양양 조도, 제주 우도, 군산 연도 6개소 중 태안을 제외하고는 갯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도서 지역이었다. 이처럼 실제 해삼양식이 사실상 조간대 공간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해삼양식 관련 사업들은 '갯벌'이라는 용어를 점차 지워가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해삼양식산업을 추진하는 정책적 의지가 시들해진 가장 큰 원인은 갯벌어업 5개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된 양식 기술 개발이 기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류 등 고등동물보다 양식이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원시적 동물인 해삼을 기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쓰루미 요시유키, 2004). 인간과 급격한 차이를 지닌 비인간 해삼의 이질성(alterity)이 해삼양식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수년간 해삼양식 기술개발에 헌신해 온 수산과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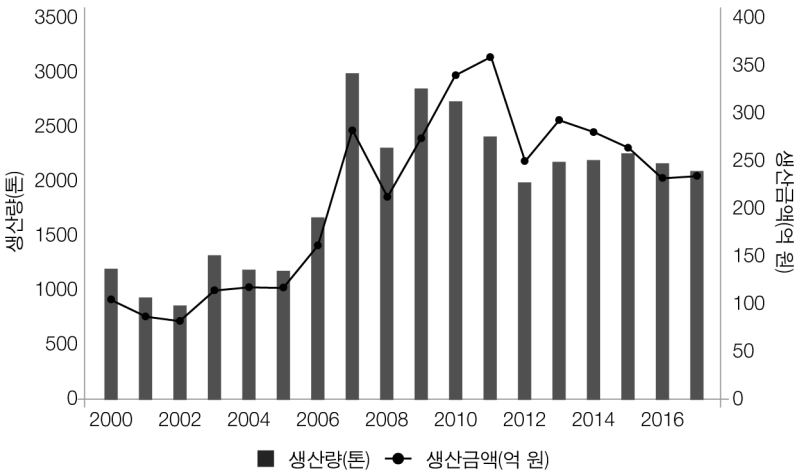
www.kci.go.kr

D에 의하면 “우리는 여전히 해삼을 알지 못한다”(2017.7.17). 해삼은 몸과 주변환경을 가르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들뢰즈식 표현으로 다공적이며(porous) 유체적인(fluid) 동물이다. 자라면서 형태, 무늬, 돌기 등이 계속 변화하고 외부 환경 조건에 적응하기 때문에 원산지(origin)를 특정하기 어렵고 개체 구분이 쉽지 않다. 또한 변이 단계에 따라 먹이와 생존환경 조건이 미세하게 달라지고, 생장환경에 따라 생체량이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일정 크기 이상으로 키워내는 양식이 쉽지 않다(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국제갯벌연구센터, 2012). 예를 들면, 수정란에서 체중 1g 이상에 이르는 어린 해삼을 길러내는 데 약 150~200일이 소요되고, 중간종묘 20g에서 큰 해삼 200g까지 키워내는 데 12~18개월이 걸린다(전라남도 수산자원과, 2016). 또한 일정 수온 이상 혹은 이하에서 하면과 동면을 해서 연중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가공시설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연유로 양식 기술 개발은 지체되었다. 씨뿌림 양식의 경우 성체 해삼으로 자라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어린 해삼이 높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거나 인공어초 등 지정된 은신처에 정착하지 못하면서 회수율이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축제식 양식 또한 해삼의 성장 단계에 따른 적합한 서식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종종 해삼의 성장이 멈추거나 폐사가 발생했다(수산과학자 D, 2017.7.17). 해삼을 길러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용 대비 투입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인간 행위자들의 개발의지를 공유하지 않는 비인간 해삼은 이렇듯 발전주의적 통치를 거부하며 자라기를 그만두거나(혹은 심지어 줄어들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으로 저항했고, 결국 해삼섬 사업은 “성과가 없다는 이유에서”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2015년 마무리됐다(박종면, 2018.10.3). 1만 톤 수준까지 해삼 생산량을 끌어올려 “연 4,000억~5,000억 원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겠다던 ‘신갯벌어업 추진계획’이 무색하게도, 국내 전체 해삼 생산량은 5개년 계획 발표 전후인 2007년 2,936톤,

www.kci.go.kr

〈그래프 1〉 국내 연간 해삼 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동 추이, 2000-2017



출처: 박광재, 201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8.

2009년 2,789톤을 달성한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4% 감소하여 현재에는 녹색성장 이전 수준인 연간 2,000톤 내외에 불과하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8)(<그래프 1> 참조).

그러나 해삼양식산업 발전 동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갯벌어업을 계기로 해삼의 대량 양식 및 대중 수출 가능성을 학습한 행위자들에 의해 해삼을 향한 발전주의적 시각은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갯벌어업 등장 당시 자체적인 해삼양식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연안 지자체들은 녹색성장-갯벌어업-해삼양식 어셈블리지가 해체된 현재 중앙정부를 대신해 해삼 양식의 개발의지를 응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갯벌어업의 주요 수혜자인 충청남도와 해삼양식산업의 후발주자인 전라남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충청남도는 경상남도 다음으로 해삼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다. 해삼의 자연서식지가 다수 존재하며, 충청남도의 모삼(어미해삼) 및 종자

www.kci.go.kr

(어린 해삼)는 종종 타지역으로 이식된다. 충청남도, 특히 태안은 지역의 특수한 환경 재해, 곧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로 황폐화된 어장의 복구와 갯벌어업이 추구하는 집약적 대량 양식 공간의 필요가 맞물리며 갯벌어업의 주요 사업지가 되었다. 그러나 유류유출 사고 장소가 해삼양식 적지인 것은 아닌 까닭에, 실제 해삼양식 관련 사업의 수혜자 중에는 유류유출 사고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입은 어촌들, 육상에서 축제식 및 수조식 양식장을 제공할 수 있는 종자생산업체들, 양식업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어업인 E, 2018.11.23).

갯벌어업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이후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 행위자들은 태안군, 국립, 도립 및 민간 수산연구소, 어업인 등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2014년 10월 충남해삼생산자협회가 설립되었고(이미선, 2014.11.6), 2015년에는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가 주관한 축제식 양식 시범사업 및 해삼섬 사업을 통해 생산한 해삼의 첫 수확 행사 등이 열렸다(연합뉴스, 2015.6.16; 한국수산경제, 2016.5.7). 한편 2016년에는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 정부공무원 및 해삼유통기업 관계자들이 태안의 해삼양식시설을 방문했는데, 이는 한중 도시 간 교류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태안군수의 의지와 한국산 해삼 가공공장을 설립하고자 했던 옌타이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충남넷 멀티미디어, 2016.11.2). 이러한 인센티브들을 배경으로, 충청남도는 현재 해삼 산업의 전 과정을 발전시키는 '해삼 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해삼을 향한 충청남도의 개발의지는 당시의 언론보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 해삼은 수심과 수온이 최적인 환경에서 자라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적어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며, 해삼을 말린 건해삼은 중국에 수출돼 최고급 해산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태안] "수출전략단지를 '해삼의 메카'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5.6.16).

www.kci.go.kr

> 해삼은 우리나라 10대 고부가가치 친환경 수산물로 수출 경쟁력이 뛰어나며 지금까지 바다에서 자연산으로 어획돼 생산량이 적었으나 축제식 양식이 산업화될 경우 육상에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축제식 해삼양식 산업화가 정착되면 2020년까지 양식장 면적 500ha에 150g짜리를 약 3000톤 생산해 건해삼으로 가공수출하면 100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예측했다(한국수산경제, 2016.5.7).

한편 전라남도는 연간 해삼 생산량이 100~200여 톤에 불과한 후발주자이지만, 해삼을 '바다의 반도체'로 만들고자 독자적으로 해삼양식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는 지역이다(진도군청 담당자 F, 2016.6.10). 전라남도는 여타 지자체에 앞서 2010년 랴오닝성 달리엔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해삼 생산업체인 장자도(장즈다오)어업유한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진도군에 한국지사를 유치하였다. 장자도가 진도를 해삼양식 적지로 선택한 공식적인 근거는 진도해역의 자연조건, 곧 "수심 20m 이내로 해삼이 서식하기 적합하고, 북황해 냉수대가 진도를 거쳐 가며 연중 7~23°C 이내의 수온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해삼을 시작으로 전복 양식, 가리비 수입 및 '대규모 수산물수출산업단지 건립'을 통한 일반 수산물 유통에 진출하고자 하는 장자도어업유한회사의 내부 계획, 장자도와 진도군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 개인 브로커, 당시의 진도군수가 "LH공사 출신으로 투자유치 전문가이며 중국 해외마케팅실장 경력이 있는" 인사인 까닭에 형성된 우호적 분위기들이 작동했다(진도군청 담당자 F, 2016.6.10). 장자도어업유한회사는 기존 어업권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산정책 및 어업인들의 반대로 인해 2015년 한국지사를 철수하였고 현재 진도에 해삼종묘배양장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6년 종묘 5만 마리를 조도면 대마도 인근 마을어장에 씨뿌림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해삼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마도는 본래 해삼이 많이 나지 않는 해역이고 해삼 채취는 수산업법에 의거하여 '도수나잠',

www.kci.go.kr

즉 잠수부에 의한 체포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역할은 수확 이후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지는 마을어장의 사실상의 임대 및 불가사리 구제에 머물렀다.

또한 전라남도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지닌 도 소속 수산과학자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양식 개발을 추진했다. 2011~2012년에는 해양수산부 공모 과제로 대련에서 직접 중국인 해삼양식 기술자들을 영입하여 종묘배양기술을 습득하였으며, 2014년에는 진도에 전라남도 해삼산업연구센터를 건립했다. 2016년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 위탁으로 물리환경, 해삼 및 해조류 분포 등 서식 여건을 분석하는 '해삼 씨뿌림사업 적지조사'를 실시하였다(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 2016). 2017년부터는 매년 지방특별비를 활용한 씨뿌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녹색성장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해삼양식산업은, 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행위자들의 개발의지와 활동이 얽혀 정부와 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적지조사, 씨뿌림(종묘 방류), 우량품종 개발 등을 통해 2차 자연의 생산 및 자연에 대한 통치가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7. 결론

본 연구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사례로 녹색성장의 기치하에 집중적으로 육성된 해삼양식산업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포스트발전국가에 의한 자본의 축적전략에 주목한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분석틀을 넘어 통치성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 자연의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어셈블리지적 관점을 도입하였다.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면적으로 포스트 발전국가의 전략적 산물로 나타나는 정책 및 제도는 사실상 다양한 스케일의 국가 및 국가 외 행위자들의 개발

www.kci.go.kr

의지가 교차하고 수렴된 결과물이다. 이는 국가 관료 엘리트가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제도의 형식을 디자인한 뒤 여타의 행위자들을 동원하는 위계적 발전국가 모델과 다르다. 외관상으로는 국가에 의해 견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의 개발의지가 복잡한 연결망을 통해 흘러들어 단단해졌다가 어셈블리지가 느슨해지고 해체되는 수순을 따라 흩어지는 패턴으로 더욱 명확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녹색성장-갯벌어업-해삼양식 어셈블리지는 자연에 대한 발전주의적 의미를 생산하고 증폭시켰으며,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자연의 생산이 가속화되었다. 갯벌과 해삼은 경제적 가능성, 곧 자본 축적의 잠재성의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되었고 이는 물질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어셈블리지의 해체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녹색성장 혹은 갯벌어업의 의의는 정책, 곧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제도와 정책, 축적 전략을 넘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치성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힘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 무엇보다도 이반적인 행위자는 해삼이었다. 해삼은 인간 행위자들의 개발의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성장(progress)의 원칙에 입각한 단선적(linear)인 발전주의에 맞섰다.

마지막으로, 해삼자원의 사유화, 양식산업의 기업화로 인한 어민들의 임금노동자화, 갯벌의 인공적인 변형 등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식 실천을 저지하기 위해 발전주의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상술하였듯, 통치성으로서의 발전주의는 무수한 행위자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대안은 발전주의적 시각의 억제가 아니라 비틀기에 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의 해삼양식 기술개발을 선구적으로 이끌고 있는 수산과학자는 해삼양식의 미래를 이렇게 구상한다:

> 10년 전만 해도 어업은 농업에 비해 천대받았어요. 갯벌은 '갯것'이었

www.kci.go.kr

죠.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 진도를 먹여 살리는 산업은 85%에 해당하는 농업이 아니라 15%에 해당하는 어업이에요. 갯벌이 아니라 '갯님'인 것이죠… 해삼양식을 [육지에서] 하면 동일한 면적에서 5배까지의 신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혁명이라는 말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해삼 키우는 농부'를 생각해 냈어요. '해삼 키우는 농부'에는 대략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농지에서 축제식 양식을 통해 해삼을 기를 수 있다. 둘째, 농업만큼 수월한 양식 방법이다. 셋째,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 해삼양식은 수고롭지 않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농어촌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양식 방법이에요(수산과학자 D, 2017.7.17).

'갯것'이 아닌 '갯님', 농업의 메타포, 소득창출 가능성 등은 여전히 갯벌에 대한 발전주의적 시각을 드러내지만, 여기에서의 '갯벌'은 연안공간을 생활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즉 공간적 의의를 넘어 문화적, 사회적 의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갯벌에 대한 그의 시각은 갯벌어업 혹은 해삼산업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갯벌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당위를 내포한다. 요컨대 발전주의에는 신자유주의와 교차하는 속성과 함께 약탈적인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발전주의의 실천에 있어 핵심적인 질문은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즉 발전의 주체와 수혜자가 누구이며 발전의 혜택을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2019년 6월 27일
심사완료일: 2019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21일
최종원고접수일: 2019년 7월 23일

www.kci.go.kr

Abstract

Green Growth-Tidal flat fisheries-Sea cucumber aquaculture: Rethinking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zation of nature through assemblage theory

Young Rae Choi

This paper conceptualizes the development of sea cucumber aquaculture industry in South Korea promoted under the national 'Green Growth' plan as a neoliberalizing process of nature. Using assemblage theory attending to heterogeneity, dynamism, and participation of multiple human and more-than-human actors, this paper extends the horizon of the hitherto state-centered South Korean scholarship on neoliberalization of nature. This paper argues that government policies and institutions, which appear to be a product of a post-developmental state strategy, in effect emerge from the crossings and convergences of state and non-state actors' will to improv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a temporary yet coherent assemblage of Green Growth-tidal flat fisheries-sea cucumber aquaculture amplified developmentalism imposed on nature and accelerated its neoliberal production. In the process, sea cucumber as a more-than-human actor performed an agency confronting the collective human actors' will to improve, resisting against a linear path of development based on the principles of progress. This paper rethinks the notion of developmentalism as consisting of individual desires, while also being a legacy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post-developmental era, developmentalism operates as a long-run force that continues to reconfigure the society. Assemblage theory is useful in thinking beyond state-centered perspectives and understanding the deeper and lasting implications of developmentalism.

Keywords: Neoliberalization of nature, assemblage, developmentalism, Green Growth, tidal flats, sea cucumber

www.kci.go.kr

참고문헌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2006.『해삼 양식 기술개발』.

_____. 2017.「해삼 양식 연구 현황 및 추진 계획」(발표자료).

김숙진. 2016.「아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대한지리학회지≫, 51(3), 311~326쪽.

김인영. 2011.「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관한 고찰: 신자유주의 국가인가, 발전국가의 변환인가?」.≪비교민주주의연구≫, 7(2), 71~94쪽.

농림수산식품부. 2010a. 신갯벌어업 추진계획.

_____. 2010b.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

박광재. 2018. 국내외 해삼산업 현황 (해삼 수출전략 TF 회의).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박배균. 2009.「한국에서 토건국가 출현의 배경」.≪공간과 사회≫, 31, 49~87쪽.

쓰루미 요시유키 저. 이경덕 역. 2004.『해삼의 눈』. 뿌리와이파리.

이상헌. 2009.「MB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환경사회학연구 ECO≫, 13(2), 7~41쪽.

이채성·박영제. 1999.「해삼, Stichopus japonicus 유생의 성장과 생존에 미치는 먹이 및 수용밀도의 영향」.≪한국양식학회지≫, 12(1), 39~45쪽.

장덕수·황진태. 2017.「한국에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강원도 양양 케이블카 유치 갈등을 사례로」.≪공간과 사회≫, 60, 226~256쪽.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2016. 중국 장자도그룹 오후강 총재 지사님 면담 보조자료.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국제갯벌연구센터. 2012.『해삼양식 가이드북』.

최병두. 2007.「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82~103쪽.

_____. 2010.「신자유주의적 에너지정책과 '녹색성장'의 한계」.≪대한지리학회지≫, 45(1), 26~48쪽.

_____. 2017.「초국적 노동이주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아상블라주」.≪공간과사회≫, 27(1), 156~204쪽.

최장집. 2008년 1월 1일.「선진화의 성장전략은 박정희 개발모델 연장」.≪경향신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 2016.『2016년 전남 해삼씨뿌림 적지조사 보고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8.『충남 해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

한국해양연구원. 2005.『갯벌 생태계조사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황진태·박배균. 2013.「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대한지리학회지≫, 48(3), 348~365쪽.

www.kci.go.kr

언론 및 보도자료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2009년 10월 12일. 「갯벌의 고부가가치 명품 수산물 산업화 생산 본격 착수」. 보도자료.

나오진. 1963년 1월 4일. 「새해의 새 호프 수산계에 혁명 일으킨 최상 박사: 오징어 새우 해삼 등 양식에 성공」. ≪경향신문≫.

농림수산식품부. 2010c. 1월 28일. 「새로 태어나는 고부가가치 황금 갯벌」. 보도자료.

동아일보. 1939년 4월 9일. 「해삼업자황금시대 만지방면수요격증: 남획에 의한 절종을 우려하고 식산국서 대책에 부심」.

박종면. 2018년 10월 3일. 「사라진 해삼섬. 현대해양」.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94.

이미선. 2014년 11월 6일. 「충남해삼생산자협회 창립총회」. ≪태안미래신문≫. http://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98.

「태안 안면도 '해삼섬'서 해삼 본격 출하」. 2015년 6월 16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0616069400063

「태안 해삼, 중국 수출 날개다나: 중국 연태시 관계자, 17일 태안 해삼 수입 논의 위해 태안 방문」. 2016년 11월 2일. ≪충남넷 멀티미디어≫. http://www.chungnam.go.kr/multi/multiMedia.do?article_no=MD0001002558&med_action=view&mnu_cd=CNNMENU00005.

「해삼 축제식 양식으로 연중 대량생산 가능」. 2016년 5월 7일. ≪한국수산경제≫. http://fisheco.com/detail.php?number=59361&thread=25r01.

Bakker, K. 2010. "The limits of "neoliberal natures": Debating green neoliberal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September), pp. 715～735.

Belton, B., & Thilsted, S. H. 2014. "Fisheries in transition: Food and nutrition security implications for the global South." *Global Food Security*, 3(1), pp. 59～66.

Bostock, J., McAndrew, B., Richards, R., Jauncey, K., Telfer, T., Lorenzen, K., … Gatward, I. 2010. "Aquaculture: global status and trend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 Biological Sciences*, 365(1554), pp. 2897～2912.

Brenner, N., & Theodore, N. 2003. *Spaces of neoliberalism: urban restructuring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Vol. 4). Wiley-Blackwell.

Castree, N. 2008a. "Neoliberalising nature: processes, effects, and evalu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1), pp. 153～173.

_____. 2008b. "Neoliberalising nature: the logics of deregulation and reregul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1), pp. 131～152.

Cons, J., & Eilenberg, M. 2019. "Introduction: On the New Politics of Margins in Asia:

www.kci.go.kr

Mapping Frontier Assemblages." In J. Cons & M. Eilenberg (Eds.), *Frontier Assemblages: The Emergent Politics of Resource Frontiers in Asia*, 1～18. Wiley.

Deleuze, G. 2004. *Anti-oedipus*. A&C Black.

_____. 2007. *Two regimes of madness: Texts and interviews 1975-1995*.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FAO. 2018.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8 - Mee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ome.

Foucault, M. 1977. Foucault, Michel. 1977. "Nietzsche, Genealogy, History." In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Selected Essays and Interviews, edited by D. F. Bouchar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Selected Essays and Interviews*, pp. 139～164.

_____. 2010.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8-1979*(M. Senellart & F. Ewald, Eds.). Picador.

Jessop, B. 2008. *State Power: A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Polity.

Korf, B. 2010. "The geography of participation." *Third World Quarterly*, 31(5), pp. 709～720.

Li, Tania. 2007. *The Will to Improve: Governmentality, Development, and the Practice of Politics*. Duke University Press.

_____. 2014. "What is land? Assembling a resource for global investment."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9(4), pp. 589～602.

Lorimer, J. 2015. *Wildlife in the Anthropocen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arcus, G. E., & Saka, E. 2006. "Assemblage." *Theory, Culture & Society*, 23(2-3), pp. 101～106.

Marshall, J. 2001. "Landlords, leaseholders & sweat equity: changing property regimes in aquaculture." *Marine Policy*, 25(5), pp. 335～352.

Müller, M., & Schurr, C. 2016. "Assemblage thinking and actor network theory: conjunctions, disjunctions, cross fertilisation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41(3), pp. 217～229.

Smith, N. 1984. *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John Wiley & Sons.

Steinberg, P. E. 2001.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Oce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Tsing, A. L. 2015.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Walters, B. B. 2007. "Competing use of marine space in a modernizing fishery: salmon farming meets lobster fishing on the Bay of Fundy." *Canadian Geographer / Le Géographe Canadien*, 51(2), pp. 139～159.

www.kci.go.kr